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 대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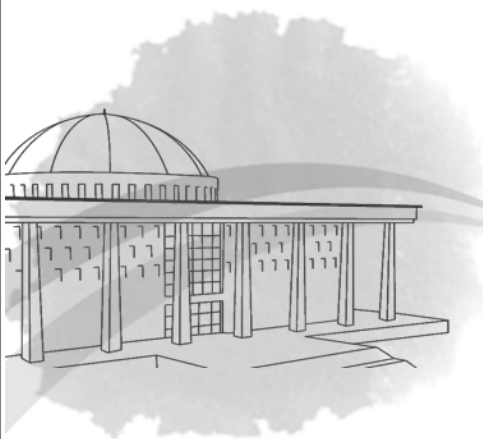
교육부 소관 예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국가교육위원회	김수환	6788-5186

목 차

I . 202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1
1.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3
가. 2025년 주요 편성방향	3
나. 주요 편성 특징	3
II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6
1. 총괄	8
1) 세입예산안	8
2) 세출예산안	8
2. 일반회계	11
1) 세입	11
2) 세출	11
3) 성과계획서	13
III . 검토의견	15
1. 세출	17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17
(1)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예산편성체계 개편 필요	18
(2) 국민의견 플랫폼 활성화 노력 필요	23

| . 202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1.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가. 2025년 주요 편성방향

-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25년 수립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획수립 지원, 이행관리 등 업무를 위해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의견수렴조정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음.

나. 주요 편성 특징

-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사업 확대를 위해 1억 7,800만원 증액하였고,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예산을 3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예산 7,600만원을 증액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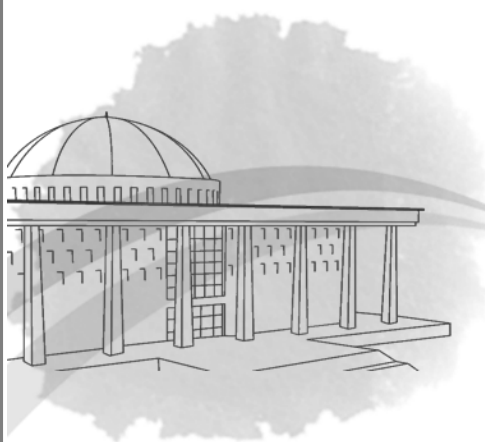
< 국가교육위원회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수정)		(B-A)	%
▣ 총지출	10,279	10,279	10,642	363	3.5
◦ 예산	10,279	10,279	10,642	363	3.5
【세부사업】	10,279	10,279	10,642	363	3.5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773	4,773	4,917	144	3.0
▪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970	2,970	3,262	292	9.8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614	614	546	△68	△11.1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22	1,922	1,917	△5	△0.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II.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괄

1)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0원임

2) 세출예산안

가. 개요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전체 운용 규모는 106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4년		2025년	증 감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B-A)	(%)
총계(예산)	10,279	10,279	10,642	363	3.5
(총지출)	10,279	10,279	10,642	363	3.5
I.예 산(일반회계)	10,279	10,279	10,642	363	3.5
(총지출)	10,279	10,279	10,642	363	3.5
1.일반회계	10,279	10,279	10,642	363	3.5
▪ 인건비	2,970	2,970	3,262	292	9.8
▪ 기본경비	2,536	2,536	2,463	△73	△2.9
▪ 주요사업비	4,773	4,773	4,917	144	3.0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5년도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억 6,300만원(3.5%) 증액된 106억 4,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이 중 인건비 32억 6,200만원, 기본경비 24억 6,300만원을 제외한 49억 1,700만원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음.

나.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1) 신규사업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신규사업은 없음.

(2) 종료사업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종료사업은 없음.

(3) 계속사업

가) 증액사업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중 2024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음.

나) 감액사업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사업 중 2024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없음.

2. 일반회계

1) 세입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0원임.

2) 세출

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출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사업비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1개임.

□ 4개 세부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소관으로, 전년 대비 대비 3억 6,300만원(3.5%) 증액된 106억 4,200만원임.

< 2025년도 사무처 예산안 내역(세부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 (A)	2024 추경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7,533	10,279	10,279	10,642	363	3.5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3,296	4,773	4,773	4,917	144	3.0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2,435	2,970	2,970	3,262	292	9.8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369	614	614	546	△68	△11.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433	1,922	1,922	1,917	△5	△0.3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주요 증감사업 현황

-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사업,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운영비용,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비용 등의 증액과 특별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 정책연구 감액 등이 반영되어 1억 4,400만원(3.0%) 증액된 49억 1,700만원임.
- 인건비는 32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2023년 12월 증원된 정원에 대한 인건비와 봉급 인상,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것임.
- 기본경비는 기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완료로 일반연구비 감액,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비용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300만원(△2.9%) 감액된 24억 6,300만원임.

3)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를 ‘안정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으로 정하였고, 비전은 ‘희망을 찾는 행복한 미래 교육’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가교육위원회는 1개의 전략목표(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1	1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I.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III. 검토 의견



1. 세출

<일반회계>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²⁾에 따른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49억 1,700만원으로, 전년(47억 7,3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3.0%) 증액편성됨.

1) 문의: 02-6788-5186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633	4,603	4,773	170	3.7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나) 검토의견

(1)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예산편성체계 개편 필요

-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은 총 4의 세부사업(인건비, 기본경비 2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격별 비중은 인건비 30.6%, 기본경비 23.1%, 주요사업비 46.2%임.

<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5예산안	비중(%)
총계		10,642	100.0
인건비	(7004-100)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3,262	30.6
기본경비	(7019-20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546	5.1
	(7019-250)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917	18.0
	소계	2,463	23.1
주요사업비	(7031-316)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917	46.2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이 중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은 위원회의 법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성 예산을 담고 있는 유일한 세부사업으로, 3개 과가 함께 또는 각각 수행하고 있는 ① 법정회의 등 운영, ②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③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④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사업의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5 예산안	내내역사업	소관 부서
계	4,917		
법정회의 등 운영	1,283	전체회의 운영 202, 전문위원회 운영 142, 특별위원회 운영 501, 자문회의 운영 148, 미래교육비전 대토론회 240,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50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2,517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1,050, 교육정책연구 767	교육발전총괄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700	교육과정정책과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477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운영 237, 모니터링단 연수 등 운영 129,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111	교육과정정책과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640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275, 국민의견수렴 전문위원회 운영 145, 홍보 지원 220	참여지원과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예산의 편성 및 심사는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처럼 사업의 목적과 성격, 범위가 다른 다양한 내역사업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이라는 단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는 경우 개별 사업의 특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음.³⁾

특히, ‘법정회의 등 운영’은 3개 과가 각각의 사업수요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되는 반면,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및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별로 소관 부서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서 편성하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자체 조정이 용이해져 사업수요에 따라 잦은 내역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되고, 성과관리 또한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용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취지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여지가 있음.

- 또한, 세부사업명은 그 명칭만으로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대상·목적·방법을 포함하여 간명하고 함축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고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및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기본 설명자료에는 내역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수준의 정보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필요성, 연차별 추진계획, 비목별 상세 산출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내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직 및 예산 규모가 유사 행정위원회에 비해 작고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이 ‘중앙관서의 장’⁵⁾의 지위에 있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의 교육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예산편성 체계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기관의 핵심 기능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⁶⁾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그보다 단기(최근 6~7년 주기)⁷⁾로 이뤄지는 등 사업별로 추진 목표와 일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사업이 자체 수요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예산편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4)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 행정위원회의 규모 및 지위 등 비교>

구분		국가교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대통령	대통령	국무총리
법적 지위		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위원 구성	위원 정수	총 21명	총 5명	총 9명
	위원장	1명(장관급)	1명(장관급)	1명(장관급)
	부위원장	-	1명(차관급)	1명(차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3명(차관급)	-
사무처	정원	31명	281명	164명
	조직	3과	3국 2관 18과	3국 1대변인 14과
	처장	고공단(나급)	고공단(가급)	고공단(가급)
2025년도 예산안		106억원	2,485억원	646억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6)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 최근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2022년 개정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된 사업 내역을 그 목적과 특성, 사업 간 연계성, 업무 효율성 및 소관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 재구조화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사 성격의 행정위원회는 물론, 교육부 소속기관의 경우도 포괄적인 명칭의 단일 세부사업만으로 주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례는 사실상 없음.

< 교육부 소속기관의 예산편성체계와 비교(2025년도 예산안 기준) >

기관명	'25예산안* (백만원)	주요사업비(세부사업명)
국가교육위원회	10,642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중앙교육연수원	8,256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
국사편찬위원회	20,644	•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학술원사무국	8,214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1,070백만원) ※ 인건비+기본경비 비중이 87.0%(7,144백만원)로 대부분임
국립특수교육원	23,996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운영
국립국제교육원	163,456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 학생교육 교류 지원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 영어교육센터 지원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 '25예산안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관 전체의 예산 규모임

(2) 국민의견 플랫폼 활성화 노력 필요

- 동 사업 내역사업 중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국민의견수렴 전문위원회 운영’, ‘홍보지원’의 세 가지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5억 9,000만원)에 비해 5,000만원(8.5%) 증액된 6억 4,000만원이 편성됨.

해당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의견수렴 전문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 2024년 1억원에서 2025년 1억 4,500만원으로 45%의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기존에 타 내역사업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 비용을 동 내내역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른 증액임. 2025년도 ‘국민의견수렴 전문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	□ 국민의견수렴 용역(설문조사 등) · 국민의견수렴 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2회)	145.3	□ 국민의견수렴 전문위원회 운영 · 국민의견수렴·조정 용역 100백만원 (50백만원×2회) ·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운영 45.3백만원 - 참석 수당 27백만원(200천원×15명×9회) - 회의자료 제작 등 9백만원(1백만원×9회) - 임차료 5.2백만원(1.3백만원 × 4회) - 위원 등 여비 2.3백만원(50천원×5명×9회) - 업무추진비 1.8백만원(30천원×15명×4회)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국민의견수렴·조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인데, 해당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을 위해 2024년 10월 “국민의견플랫폼”을 신규 개통하였고 아직 플랫폼상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및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대한 요청이 제출된 건은 없음.

그러나 해당 플랫폼 개통 이전에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였는데, 게시판을 통해 제출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2024년 1월부터 20건에 불과하고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단 5건만 제출되었으며, 25건의 요청 모두 국민의견 수렴·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⁸⁾.

-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중 ‘국민의견수렴 용역’을 위해 편성한 예산과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전혀 집행되지 못한 상황임.

8) 최다 동의 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 교양 영역 교과 분리 및 필수 이수 단위 지정” 요청으로 1,781명의 동의가 이루어짐.

그러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의 의견수렴조정절차 진행 여부 결정 기준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이고, ‘국민의견 수렴·조정’의 경우 ‘9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의견수렴조정 절차 진행이 이루어짐.

< 2024년 국민의견수렴·조정 관련 예산집행 현황('24. 10. 기준) >

(단위: 백만원, %)

	'24년도 예산액	집행액 ('24. 10. 기준)	집행률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운영	39	0	0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244	198	81.1
국민의견수렴 용역	100	0	0
홍보지원	246	114	46.3
계	629	312	49.6

주) 2024년도의 경우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은 '법정회의 등 운영'의 내내역사업인 '전문위 운영 등'에 통합 편성됨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 2023회계연도 결산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홈페이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시정요구(제도개선)가 채택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신규 개통한 국민의견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국가교육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2025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